

☉ **창업지원센터 종합평가 발표**

전국 대학에 설치된 28개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가운데 고려대 지원센터가 최우수 센터로 선정됐다. 정보통신부는 각 지원센터의 입주환경과 업체관리의 효율성, 경영 및 기술 지원효과, 입주자 만족도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려대 지원센터가 최우수 센터로 뽑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며, 우수 지원센터로 인하대, 한양대, 경북대, 순천향대, 강원대, 동의대의 지원센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각 대학에서 추천한 47개 입주 업체에 대한 사업아이템의 독창성, 기술의 우수성, 시장성 및 사업계획의 우수성을 평가한 결과에서 고려대 지원센터의 보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업체인 시큐리티 테크날로지스가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다.

☉ **대학의 주요시설 세부 조성계획 제출요구**

서울시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20개 대학에 건물·도로·광장 등 주요 시설물의 세부 조성계획을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 서울시에서는 주변 여건과 녹지 훼손 정도 등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심의해 개발 형태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대·중앙대 등 7개 대학의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가 끝나, 건국대는 녹지대를 통과하는 외곽순환도로 건설이 취소됐으며 10층 예정이었던 인문과학관의 높이가 8층으로 낮춰졌다. 또 한성대는 3개 건물의 신축이 유보됐으며, 학생회관의 건축 예정지가 바뀌었다. 중앙대가 10층으로 지으려던 복합 건물의 높이는 5층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자연 경관이 뛰어난 북한산·관악산·안산·개운산 등과 접해 있는 대학들이 구청으로부터 쉽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마구 짓는 바람에 삼림 등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는 내년까지 60개에 달하는 모든 대학에 대해 세부 조성계획 수립을 유도,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캠퍼스 개발에 대한 세부 조성계획 의무화 법령이 마련되기 이전에 개발계획을 세운 학교에도 이를 강제한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때 세부 조성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하는 대상에 대학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 규정은 법 개정 이후에 신설

되는 대학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설 대학은 세부 조성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기존 대학의 경우 이를 강제할 근거는 없다"며 "추가로 시설물을 조성할 경우 건축허가심의 절차 등을 활용해 계획안을 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요무형문화재 문학생도 학력 인정**

교육인적자원부는 5월 4일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 육성하고 노령화를 막기 위해 이들과 문학생의 학력과 학점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판소리, 탈춤, 택견, 궁중음식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학생 중 고졸 이상자는 정규대학에 가지 않아도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학사,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193명 및 이들의 문학생 등 약 2천 200여 명 가운데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 1천 600여 명이 학력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곧바로

대학 졸업 학력을 인정받아 학사 학위를 받고, 문하생들은 학교교육개발원의 학점은행제 운영실에 학습자 등록을 하고 일정 과목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졸 학력 이하의 중요무형문화재와 문하생, 시도무형문화재는 학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직발전 종합 방안

최종안 확정

빠르면 내년부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도 교사로 채용되는 등 교·사대 출신에게만 제한돼 온 교직의 문호가 외부에 개방된다. 또 2004년까지 교사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되고, 2005년까지 학급 담임 수당과 보직수당이 인상되며, 내년부터는 학교·지역별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31개 항목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5월 15일 밝혔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은 '99년 교원정년단축 조치 이후 교단의 동요를 잠재우고 교원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99년 12월 시안이 발표된 후 지난해 9월 최종

안이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8개월여 이상 지연돼 왔다. 이 안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직업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초·중등교육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 학자금용자 246억 과다 편성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학자금 용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자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246억 원의 예산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4월 국회 교육위 권철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0년도 예산집행 및 기금관리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60만 명의 학자금용자 이자 국고지원분으로 기획예산처로부터 451억 원의 예산을 따냈으나 이중 실제로는 21만 5천여 명에게 205억 원만 지급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히 불용 처리된 246억 원 중 10억 원을 광주민주화운동 해직교원 손해배상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상당액을 부당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사학진흥재단은 지난해 사립대

재정용자금과 관련, 용자 지원이 필요치 않은 H대학에 111억 원 등 제정이 양호한 22개 대학에 512억 원을 지원했으나 이중 310억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내 분류 대학 감사 실시

교육인적자원부는 5월 20일 "한달 넘게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덕성여대를 비롯해 최근 교수 책임용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분류를 겪고 있는 이주대, 한세대 등에 대해 5월 21일부터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에는 이들 분류 중인 대학 외에도 최근 교수 채용 규모가 많고 채용 과정에 잡음이 불거져 나온 5~6개 사립대학 등 모두 10개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이들 대학에 5월 21일부터 3~4일 동안 대학마다 2~3명의 감사요원을 파견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교수 책임용 심사 절차의 적정성 △재임용탈락 판정기준의 타당성 여부 등 주로 인사 문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리고 제도 개선책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덕성여대에 대해서는 다른 대학보다 2배

이상의 감사 요인을 투입해 교원 인사 외에도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역특화 연구지원 사업' 내년부터 통합

기획예산처는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각각 주관하던 '지역특화 연구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통합·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역특화 연구지원 사업은 지역의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과기부가 "지역협력연구센터"에 대해 연구비를, 산자부는 "지역기술혁신센터"에 대해 기계와 장비 구입비를 별도로 지원해 왔다. 기획예산처는 우선 지역·분야별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 중복 연구를 방지하는 한편 고가 장비의 공동이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연구인력간의 교류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재단과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술개발 분야 평가업무에 대해서도 정밀 실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내년부터 대학에 '나노' 학과 개설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차세대 선진기술로 급부상중인 나노기술(NT) 분야에 총 1조 3700억 원(민간자금 포함)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NT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3~4개 국내 종합대학에 나노기술 관련 학과를 별도 개설하고, NT 관련 분야에 참여중인 연구원들에게 병역특례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또 현재 1천여 명에 불과한 NT분야 연구 인력을 2010년까지 연인원 1만 3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나노(nano)기술이란 10억분의 1수준(원자와 분자크기)의 극미세기술을 말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 5월 24일 발표했다.

● 교육 분야 특별감사 착수

감사원이 5월 22일부터 40여 일 일정으로 조직과 재정 등 교육 분야 전반을 점검하는 대규모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교육 분야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종합감사 성격"이라고 밝히고 "교육 재정

의 투명성 및 효율성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원의 근무 여건 등을 이 기회에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감은 교육인적자원부, 국립대, 교육청, 초·중등교 등을 대상으로 1, 2단계로 나눠 실시되며 총 102명의 내외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1단계는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2단계는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감사원은 현지감사를 끝낸 뒤 교육인적자원부의 감독책임 점검도 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감에서 ▲국립대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초·중·고교의 조직 및 인력관리 실태 ▲국립대 기성회비와 중·고교 학교운영 지원비(육성회비) 집행 실태 ▲26조원에 이르는 교육예산의 편성·집행 실태 ▲연구용역의 수주 및 관리 실태 ▲각종 행사 동원 등 초·중교사의 잡무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김조원 4국 3과장은 "교육예산의 경우 그동안 한번도 종합적으로 점검한 사실이 없을 정도로 운용의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해에 1조원이 지원되는 대학의 연구용역비는 연구 결과 검증이 부실해 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99년 시작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두뇌한국(BK)21' 사업도 특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7년간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BK21'은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과 대학의 사업비 운영상 문제점으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 교원예우 특별법 제정

정부와 민주당은 교사 위상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지위 향상특별법'과 대통령령인 '교원예우규정'을 통합한 '교원의 사회적 예우 및 지위향상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2004년까지 교원 정원을 2만 2천 명 증원하는 내용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확정했다. 당정회의는 민주당과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5월 26일 열렸다. 민주당 공교육종합발전특위 장을병 위원장은 "교사를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라는 자세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를 비롯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교직발전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교사의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고 경력 15년 이상된 교사가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 중 보수의 1백%(교육인적자원부 안은 70%)을 지급하기로 했다.

☞ 2001년도 교육개혁추진 우수 대학 재정지원사업 시행계획(안) 발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교육개혁 추진 실적 및 계획을 평가하여 우수대학에 대한 특별재정지원을 실시하는 '2001년 교육개혁추진 우수 대학 재정지원사업 시행계획(안)'을 5월 27일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대학의 자율화 확대에 따른 책무성 강화, 평가 결과에 따른 제정의 차등지원 강화를 통한 경쟁적 개혁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의 교육개혁 추진 등인 제공으로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운영의 질적 개선, 대학의 구조조정 추진 등을 그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도부터 공·사립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학교 수 149개교, 지원학교 30개교, 지원금액은 150억 원이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서 및 자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자료실/공개자료실 [1451번]에 게재되어 있다.

☞ 2003학년도부터 4년 과정 의·치학 전문대학원 도입

2003학년도부터 4년 과정의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이

하 전문대학원)이 대학별로 생겨 대학에서 (치)의예과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의사가 될 수 있는 등 의학교육제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배워 90학점 이상을 이수한 뒤 '의학·치의학 교육입문시험(MEET)'에 통과한 사람은 이 전문대학원에 들어가 의사가 될 수 있다. 현재 고교 졸업자가 (치)의예과에 들어가 의사가 되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위원장 허갑범 연세대 의대 교수)는 6월 5일 서울대 치과병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기본모형'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 41개 의대와 11개 치대가 대학 사정에 따라 2003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전문대학원을 단계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7개 대는 2003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을 개설해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은 기존 (치)의예과 또는 본과 과정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면서 전문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연세대 등 4개 대는 의예과를 폐지할 방침이다. 전문대

학원 졸업생은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쳐 임상전문 전공의가 되거나 학술학사 과정을 밟아 의학박사(Ph.D) 학위를 받는 두 과정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감 직선제 검토

정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접선거로 뽑고 있는 현행 시도 교육감 선거제를 지방자치제 선거와 연계한 주민 직접선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자체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위(위원장 노종희 한양대 교수)를 통해 연구 용역을 시행 중이며, 개선위는 '직선제가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관계자는 6월 6일 "교육감 선거의 불·탈법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민 직선제를 현행 선거제도 보완 방안과 함께 유력한 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 출마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운영위원의 투표로만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은 '교육 자치체' 도입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직선

제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도입 여부와 시기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관계자도 이와 관련, "교육감 선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제도를 고친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부 방침"이라며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각 교육감(임기 4년)은 지자체 선거일에 각 지자체장과 함께 주민투표로 뽑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대학원 총괄정원제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6일 사회 수요에 맞춰 효율적으로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총괄정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화진 대학행정지원과장은 "특정 분야 석·박사의 과잉 양성을 막고 심각한 박사 인력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 때부터 학생의 지원율에 따라 전공별 정원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생명공학의 박사 과정에 50명, 영문학에 20명, 철학에 8명이 지원했다면 전체 정원 범위 안에서 지원 비율에 따라 25명, 10명, 4명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미 박사급 실업률이 70~90% 가량되는 국문학·철학·역사학·수학 등의 전공에는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 전공과정 운영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99년 박사 인력의 취업률 집계'에 따르면 이공계는 74.1%에 이른 반면 인문사회계는 51%에 그쳤다. 정보통신(IT) 분야는 부족하지만 인문 분야는 공급과잉이라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분석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지난해까지 박사학위를 받고도 취직을 못한 박사 실업자(시간강사 포함)는 36.5%인 1만3,454명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인문계 54.4%, 사회계 31.7%, 이학계 41.8%, 공학계 18%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기적으로 고급 인력의 수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박사 지망생들이 올바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수시합격자 예비과정 출석 인정

교육인적자원부가 6월 8일 발표한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 생활지도 대책'에 따르면 1학기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이 끝난 뒤 입학이 확정되는 고3 학생들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대학에서

마련한 예비대학 과정이나 시·도교육청의 교양·문화강좌, 수련활동 등에 참가하면 체험학습으로 처리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입학 확정자 체험학습은 학기 중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강의 청취, 학사지도·교수와 연계한 개인별 지도 프로그램 참가, 대학에서 제시한 독서 및 독학 목록 학습 등이며, 방학 때는 예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문학캠프나 실용영어캠프 참여, 방학 중 개설된 특별강좌 이수 등이 가능하다. 이때 반드시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결석 처리돼 수업일수 부족으로 졸업을 못하게 된다.

☪ 2003년까지 여성 연구인력 10% 채용

오는 2003년까지 전국의 국·공립대학 이공계 교수와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 가운데 10%를 여성 과학기술인력에게 할당하는 이른바 '채용쿼터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은 6월 11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고급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2003년까지 국·공립대 이공계 교수와 출연 연구소 인력의

10%를 여성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이 흐름을 강화해 오는 2010년까지 20%까지 여성과학 인력의 비율을 확대, 고급 여성인력이 사장되는 일을 정책적으로 방지하고 점진적으로 여성 과학 기술자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1개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원 가운데 여성 과학자의 비율은 6.9%며 이공계 대학 여성교수는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장관은 또 "현재 미국 버클리 공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 여자 공대생 지원 프로그램인 WISE(Women In Science & Engineering) 등을 벤치마킹 해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올해로 완료되는 이화여대 등 5개 여자대학에 대한 연구기반 확충 사업을 연장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고급 여성 과학인력 양성 지원 계획을 밝혔다.

☪ 내년 수도권대 1,200명 증원

그동안 증원이 억제돼 온 수도권 대학의 2002학년도 대입 신입생 정원이 대폭 늘어 입학 문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6월 11일 "그동안 수도권 대학의 입

학정원은 수도권 인구유입 억제를 위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세 차례를 제외하고 동결돼 왔으나, 올 대입에서는 IT·사이버무역·신소재 등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의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 9월부터 시행된 '두뇌한국(BK)21' 사업에 따라 정원을 축소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해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면서 생긴 자체 학부 정원 감축분 1,200여 명을 교육여건이 우수한 다른 수도권 대학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 국립대학 특허권 부여 검토

산업자원부 장관은 6월 18일 "대학의 산업기술개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학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무역협회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정책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특허 관련 법률은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의 직무상 발명을 국고에 귀속시키면서도 응분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어 국립대 교수의 특허권 등록 실적이 매우 저조할 실

정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국립대학은 직접 특허권을 갖고 사업화가 가능한데다 수익금을 학교, 연구실, 발명자간에 고루 배분하고 있어 특허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국립대학교 내 별도법인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 마련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이버 대학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올 하반기부터 ‘사이버 대학’도 일반대학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고교를 졸업한 사이버 대학 신입생의 경우만 24세까지 병역연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20일 사이버 대학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병무청, 보건복지부 등에 이같은 내용의 협조요청서를 보내는 한편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생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은행연합회 지침에 사이버 대

학생을 포함시키기로 전국은행연합회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대학생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저렴한 금리로 등록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까지 예상되는 사이버 대학생(13만명) 가운데 병역대상자가 1만명 미만으로 병역연기 혜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고교를 졸업하고 사이버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24세까지 병역연기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실기교사의 자격 기준에 사이버 대학 학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대학 졸업생도 자격 기준에 고시된 과목만 이수하면 이들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 교수계약제 신규채용

교수만 적용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02학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인 교수 계약임용제에 대해 “신규 채용 교수에 한해 적용하고 기존 교수에 대한 적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재임 중인 교수와 신규임용 교수를 포함해 모든 국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계약임용제를 실시한다는 기존 국·공립대 발전방안에서 크게 물러선 것으로, 국립대와 보조를 맞추려던 사립대 계약임용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부총리는 6월 28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대학총장 하계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한 부총리는 5월 29일 서울대를 방문해 이기준 총장과 각 단과대 학장, 신용하 교수협의회장 등 40여 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에 대해서까지 계약임용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계약임용제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부총리는 “국·공립대 발전방안이 오히려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교수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국·공립대를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대학 등으로 무리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대학별로 학문의 우수성과 형평성 추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방안을 담은 발전계획을 마련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